

2024. 6. 11. (화) 10:00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24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조정기간 단축,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한 층간소음 관련 시민의 분쟁조정 신청 활성화 유도, 보조금 지원사업의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반영 및 상위법과의 체계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

-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주택법령을 근거 규정에서 제외

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및 보조금 지원대상 명확화를 위한 규정 정비(안 제2조)

-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기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으로 개정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도 지방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포함

다.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제1항이 보조금 지원 근거임을 명시

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안 제4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기존 ‘3년’ 에서 ‘5년’ 으로 검증 기간 확대로 단지별 중복지원 제한 및 수혜 단지 확대

마. 제2조 본문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안 제4조의4)

- 제2조 본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에서 “법 제34조” 로 용어 생략

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의3에 맞춘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투명한 보조금 지원심의를 위한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

사. 맞춤법에 따른 정비(안 제4장 제목,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띄어쓰기 맞춤법에 따른 규정 및 서식 정비

아. 조정대상 명확화를 위한 규정 정비(안 제15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는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

자. 법상 조정대상과의 균형적 관점에서의 규정 정비(안 제17조)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서 기존의 자문을 삭제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명시

차.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한 단축을 위한 규정 정비(안 제21조)

- 제21조제3항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고 규정한 것을 “한차례로 한정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 고 함으로써 조정기한을 단축하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신속처리를 제고

카. 신청정보 간소화를 위한 안내 사항 추가(안 별지 제2호서식)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 양식에서 피신청인의 주소 이외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선택 기재 사항으로 규정 함으로써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유도

4. 참고사항

○ 부서협의 결과

- 1) 협의기간 : 2024. 4. 17. ~ 4. 19.

2)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입법예고 결과

- 1) 예고기간 : 2024. 4. 25. ~ 5. 16. (21일)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체계적 통일성을 기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근거 규정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개정된 조례 내용 등은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검토한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